

---

**3월 1-2주차 분야별 이슈  
&  
정세 분석 전망 보고서**

---

2016.03.03.

정책위원회  
미래정치센터

## 차례

### 1. 정부행정 (정미나) | 1

정부 '저성과자 해고' 실상 드러나나 ... 제2의 세월호·메르스 사태 다시 초래할 것인가

### 2. 과학기술 (고광용) | 4

미래부, ICT R&D투자로드맵 수립...중장기 전략수립 구조의 전면전환 필요

### 3. 정치 (박철한) | 6

국민을 인질로 한 박근혜식 협박정치

### 4. 여론동향 (심은정) | 9

I 해외 - '슈퍼화요일' 이변은 없어... 트럼프와 힐러리 대승

II 국내 -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정당 구도 바꿀 정도는 아니야...

「분야별 이슈&정세분석전망 보고서」는 정의당 정책위원회와 미래정치센터가 정의당의 분야별 이슈 발굴 및 검토와 정세분석전망, 당론 결정에 참조하기 위해 매월 2회 격주간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보고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편집      김정순(미래정치센터 사무국장) : [0225jsk@hanmail.net](mailto:0225jsk@hanmail.net)
- ❖ 문의      좌혜경(정책위원회 정책실장) : [left95@hanmail.net](mailto:left95@hanmail.net)  
              박철한(미래정치센터 연구실장) : [gaea123@naver.com](mailto:gaea123@naver.com)

# 1. 정부행정

○ 정부 ‘저성과자 해고’ 실상 드러나나 .. 제2의 세월호·메르스 사태 다시 초래할 것인가 - 외교부는 일선공관 한시직 직원 대량해고, 청와대는 문제제기한 외교부 직원 징계 조치

- 지난 1월 외교부는 일선공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담당하는 중국인과 교민 등 현지인력 한시직 약 120명을 대량 해고 한바 있음.
- 이유는 정부가 비자발급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하면서 수입 감소가 예상됐기 때문. 이는 작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해 중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정부가 중국 등 5개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비자수수료 면제를 1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것에 따른 것. 본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됐으며 작년 12월 법무부가 발표했다.
- 이에 외교부는 그동안 비자발급 수수료로 해당 인력 인건비를 충당해 온바, 수수료 면제 조치로 인해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지급이 어려워지자 이들을 대량 해고한 것.
- 문제는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함이었다는 것. 결국, 관광객 확대 조치를 위하면서 정작 비자발급 인력을 해고해버린 역설적인 상황을 초래한 것.
- 뒤늦게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기재부 관계자들이 모여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외교부 본부예산을 할애해 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외교부는 아시아 11개국 21개 공관에 공문을 보내 “한시적인 ‘사증심사 보조인력’에 대해 6월까지 계약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라”고 지시함.
- 이렇게 일단락 된 것처럼 보인 비자발급 ‘무개념’ 사건은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한 외교부 직원들에게 청와대가 강도 높은 인사 조치를 단행한 것이 드러나면서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음.

- 정부가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를 연장하고 외교부가 담당 계약직 직원을 대량 해고하자, 외교부 담당직원들은 청와대와 법무부에 연장을 재고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바 있음. 이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과 심의관, 담당과장을 강도 높게 조사하고 이들에게 좌천성 전보인사를 하라고 지시한 것. 이유는 항명성 ‘공직기강 위반’이라는 것.

## ☞ 당의 입장 및 대응

- 이번 비자발급 수수료 사건에서 드러난 청와대와 외교부의 인사조치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 먼저 외교부는 단지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 120여명을 곧바로 대량 해고함. 더 큰 문제는 이것이 미칠 파장은 고려하지도 못한 채 정책의 본래 목표와 상충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 이는 인력운용을 단순히 ‘돈’의 문제로만 접근할 뿐 ‘업무’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것.
- 한편 청와대는 해당 외교부 직원들이 타당한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이들의 의견대로 시정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단순히 ‘문제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보복성 인사징계를 단행했음. 이는 직원들의 ‘문제제기’를 ‘항명’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타당한’ 문제제기라도 직원들의 반대의견 자체를 용납 못한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
- 청와대는 직원들의 의견제시를 ‘공직기강 위반’이라는 이유로 징계조치 했지만, 바로 이것이야말로 공직기강 해이를 자초한 것. 본 사건은 일차적으로 외교부와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시정조치를 해야 할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직원들이 청와대에 공문을 보냈다면, 청와대는 관련 문제를 파악하고 관계부처가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조력함으로써 일선공무원들의 책임행정을 독려했어야 함. 그러나 청와대는 정반대로 일선 공무원들에 대한 문책을 외교부에 직접 지시함으로써 정부 내 위계를 무너뜨리고 일선 공무원들이 자기 부처를 넘어 청와대까지 ‘눈치’ 보게 만드는 독단적 권위주의의 전형을 드러내고 말았음.

- 보다 더 큰 문제는 청와대와 외교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가 사실은 세월호와 메르스와 같은 대 참사의 원인과 같은 맥락이라는 것. 본 참사는 사건 초기 대응의 실패가 야기하는 최악의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며, 여기서 현장 직원들의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업무태도가 결정적 역할을 한 바 있음.
-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선 직원들의 책임성 있는 재량권 행사가 가장 중요함. 현장에서는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직원들의 유연성 있는 업무대처 능력이 전체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음. 따라서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일선 직원들의 유연성 있는 업무 능력이 중요하여 이때 전제돼야 할 것이 바로 책임성임. 이를 위해서는 정부든 기업이든 인력을 운용함에 있어서 직원들이 책임 있게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업무환경을 보장해주는 것이 중요.
- 그런데, 청와대는 책임 있는 대처를 한 직원들을 징계하고, 외교부는 업무의 중요도는 고려치도 않은 채 ‘돈’이 없다는 이유로 일시에 대량해고를 단행함. 이러한 조직 환경에서 직원들이 책임성을 갖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함.
- 최근 청와대는 ‘저성과자 해고’를 위해 대국민 서명을 전개하면서까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그러는 와중에 정부 내에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저성과자 해고’가 바로 인건비 때문에 해고를 쉽게 하고, 사측의 심기를 건드릴 경우 인사 조치를 단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킴. ‘저성과자 해고’가 경제성장과 고용촉진의 유일한 방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정부가 실상 직원을 고용하고 해고함에 있어, 그리고 업무 중요도와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어 보여준 유일한 기준은 ‘돈’과 ‘복종’이었음.
- 이러한 시각을 가진 정부 추진하는 ‘저성과자 해고’. 이것이 실제 현장에 적용됐을 때 기업들이 정부와 같은 방식으로 무기를 휘두를 경우, 우리나라 노동자 전반의 사기가 저하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하고 소극적인 업무행태가 야기될 것임. 그렇게 될 경우, 이는 경제성장 방안은커녕 한국 사회 전반에 제 2의 세월호와 메르스 참사를 야기하는 최악의 정책이 될 것임.

## 2. 과학기술

### ○ 미래부, ICT R&D투자로드맵 수립...중장기 전략수립 구조의 전면전환 필요

- 미래창조과학부는 2월 29일, 정보통신기술 R&D의 선택과 집중 강화를 위해 'ICT R&D 투자로드맵 2020(안)'을 마련하여 ICT R&D 투자생산성 제고 계획을 밝혔다. 이번 로드맵은 K-ICT 9대 전략분야를 반영한 10대 기술분야 선정 및 분야별 중점투자영역 도출과 투자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9대 전략분야를 전략산업 및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간다는 계획임.
- 투자로드맵은 2015년 하반기부터 ICT분야 산학연 전문가 110명으로 구성된 '로드맵 추진위원회'를 통해 수립되었음. 연도별 투자전략 수립을 위해 유망기술을 다차원으로 평가한 투자 포트폴리오를 통해 83개 중점투자분야와 419개 요소기술을 도출했음.
- 10대 기술분야는 융합서비스, 이동통신, 네트워크, 방송·스마트미디어, 전파·위성, 기반SW컴퓨팅, SW, 디지털콘텐츠, 정보보호, ITC디바이스 임. 기술분야별 중점투자로는 융합서비스 분야는 스마트팜, 맞춤형 스마트 관광정보 서비스, 건강정보 빅 데이터 분석, 이동통신 분야는 상황인지 서비스 플랫폼, 초연결 기반 초지능 서비스, 네트워크 분야는 풀, 모바일 엣지 컴퓨팅, 방송스마트미디어 분야는 초고화질(UHD) 송출·송수신, 실감미디어 서비스 플랫폼, 재난 방송 등이 중점 영역으로 선정되었음.

### ☞ 당의 입장 및 대응

- 기존에 과학기술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이 공통으로 문제제기 했던 우리나라 R&D의 근본적인 문제는 정부 주도의 R&D 중점투자영역 및 투자전략 수립과 단기 성과 위주 정책이 있었음.

- 이번, ICT R&D 투자로드맵 2020 마련 과정에서도 비록, 11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지만, 여전히 미래부 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2020년까지 로드맵으로 5년의 단기성과 전략임. 과거에 주로 고질적으로 문제되었던 구조적인 정부주도 단기성과 위주 R&D 정책결정 방식과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 선정된 기술을 보면, 관광정보 서비스, 건강정보 빅 데이터, 초고화질 송출, 장애인 방송, 헬스케어/의료 보안, 사회안전 감시시스템, 재난 방송 등은 정부 주요 관심 분야로, 직접적으로 성과가 나왔을 때 전략적인 정책홍보가 가능한 분야임. 또한 주요 기술들이 대부분 기초·원천기술이 아닌, 응용 혹은 상용화 단계의 기술개발임
-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바람직한 R&D 투자방향은 기본적으로 기초·원천기술이 주가 되어야 하며, R&D 지원의 시계는 5년이 아니라 수십 년을 내다보아야 함.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기존에 미래부 주도 한시적 로드맵 추진위를 통한 R&D 중점투자 영역 및 방향 결정 구조의 파괴적 혁신이 필요함.
- 미래부 등 정부부처의 개입을 최대한 배제시키기 위해 민간위원장 중심의 상시적 범정부 과학기술위원회 설립이 필요하며, 정부위원은 장·차관급이 아닌 실무자 위주로 구성하고, 결정 및 참여 제한 등 결정구조가 재정립되어야 함.
- 민간위원은 45명 수준으로 증대하고, ICT 분야의 R&D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 결정에 대해서도 ICT 과학기술계 교수, ICT 관련 출연연 원장, 과학기술 활용 중소기업 및 대기업 사장단, 공공연구노조 측 ICT 전문가 대표, ICT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을 골고루 포함한 15명의 민간위원이 총괄적인 결정을 담당해야 함. 구체적인 세부 정책결정 및 예산배분은 ICT 연구 대학원생 및 대학 연구원, ICT 출연연 소속 연구자 및 기관별 노조 대표, 민간기업 R&D 연구원 등 30명의 실무 민간위원을 구성하여 계층성을 둔 이원화 체계로 결정구조를 가져가야 함.
- 또한 향후 미래부 주도 ICT R&D 로드맵 수립 시 응용·상용화 단계 기술개발은 민간기업이나 대학에 넘기되 일부 지원 및 연계 추진하는 반면, 기초·원천 기술 개발은 ICT 관련 출연연과 대학에서 주로 맡되, 정부가 상당부분을 지원하는 등 R&D 주체 및 역할의 재정립이 필요함.

### 3. 정치

#### ○ 국민을 인질로 한 박근혜식 협박정치

- 박근혜 대통령은 97주년 삼일절의 뜻을 무색하게 하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이어 일본과 졸속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여 국격을 나락으로 떨어뜨렸음.
- 급기야 남북평화의 상징이자 보루인 개성공단을 폐쇄하더니 최근에는 반민주 악법이자 국정원 무한강화법인 테러방지법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 삼일절 기념사에서 악법인 테러방지법에 대한 야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를 빌미로 엄정 선거중립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야당심판론’을 내세우며 20대 총선에 불법 선거개입과 야당탄압에 몰입.
-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고 있는 상황. 국민을 토끼몰이 하듯 공포몰이에 몰두하고 있음.
- 이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행태는 유년기와 성년까지의 청와대 경험과 아버지로부터 개발독재형 통치력 내면화된 리더십이 현재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 정치력의 본질. 가족사의 비극으로부터 피해 망상적이고 대단히 독선적이고 권위적인 현재의 리더십이 발현.
- 또한 이러한 이면에는 영남, 5060세대, 보수세력으로부터 40%의 공고한 국정 운영지지율이 뒷받침하고 있기에 가능. 총선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독주 지속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

#### ○ 친박-비박, 공천전쟁 진행 중

-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의원을 중심에 둔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작성했다는 40명의 공천 살생부가 논란을 일으켰음. 이 살생부에는 이인제, 서청원 등 친박 중진과 정두언 등 비박계가 포함되었음. 그러나 친박-비박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긴급 봉합되었음.

- 친박계에서는 이 논란이 커질 경우 박근혜 대통령에게 살생부가 사실이든 아니든 청와대에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주는 문제, 비박계의 경우엔 김무성 대표 이후에 대안이 마땅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서둘러 타협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3월 15일까지 진행될 지역구 후보 내부 경선을 앞두고 친박-비박간의 갈등은 최고조에 달할 것임. 물론 집권여당으로서 양계파간 한발씩 양보하여 타협점을 찾겠지만 어느 한쪽이 독식하려는 상황이 오면 그 결과는 예측불가능하게 흘러갈 수 있음.

### ○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김종인 대표 야권 통합 제안

- 2월 23일(화)부터 진행된 테러방지법에 대한 정의당, 더민주, 국민의당 등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47년 만에 부활한 제도답게 국민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었음.
- 폭력 없는 국회의 제도화, 다수당의 입법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 제도화, 세계 최장시간의 필리버스터 진행 기록, 여야 지지자들의 결집 등.
- 그러나 더민주 지도부는 다가오는 총선에서 안보 이슈로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다는 판단 하에 3월 2일(수)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였음.
- 김종인 대표는 당내 필리버스터 중단에 따른 갈등 차단, 야권의 총선 주도권 강화를 위해 전격적으로 국민의당, 민주당에게 통합을 제안. 정의당에게는 야권연대, 정책연대를 제안할 것으로 보임. 국민의당 지리멸렬로 봤을 때, 1:1 대결구도를 만들기 위해 물밑 협상을 통한 총선 전 극적인 야권통합이 성사될 수도 있음.

### ☞ 당의 입장 및 대응

- 정치는 다른 어떠한 영역보다 선거결과로 평가받는 영역임. 정당의 의회진출, 퇴출, 성장을 판가름하는 것이 선거결과임. 당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20대 총선에서 가시적인 성과 만들기에 집중해야 할 것임. 당의 불출마 지역구에서 집중적인 정당투표 운동을 독려해야 함.
- 또한 지역구 돌파전략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임. 지역구선거 운동의 성과가 비례대표 투표로 이어지도록 유능한 인물론, 지역밀착형 공약 제시, 유권자의 정의당 선택을 유인할 수 있는 메시지, 매력적인 홍보 방안 등을 통해 유권자 표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함.

## 4. 여론동향

### I. 해외 여론동향

#### ○ 2016, 미국 대선

##### ▶ ‘슈퍼화요일’ 이번은 없어... 트럼프와 힐러리 대승

- 미국 대선 경선 과정의 최대 승부처가 되는 ‘슈퍼화요일’에서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승을 거둠. ‘슈퍼화요일’은 미국 경선 과정 중 가장 많은 주의 경선이 한번에 열리는 날로, 전체 대의원의 25~30% 정도가 결정돼 미 대선 결과까지 예측해볼 수 있어 미국 대선의 승부처라 불림.
- 3월 1일(현지시간) ‘슈퍼화요일’에는 조지아, 버몬트, 버지니아, 앨라배마, 메사추세츠,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아칸소, 미네소타, 알래스타, 콜로라도 총 12개 주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이번 ‘슈퍼화요일’에는 전체 대의원 중 15%가 결정됨.
- 이 중 공화당과 민주당이 동시에 경선을 치른 주는 총 10개 주로, 조지아, 버몬트, 버지니아, 앨라배마, 메사추세츠,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아칸소, 미네소타주임. 이 외에 공화당은 알래스카에서, 민주당은 콜로라도에서 경선을 치름.
- 결과 ‘슈퍼화요일’에서는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함.
- 공화당에서는 도널트 트럼프가 6개 주, 테드 크루즈 의원이 2개 주,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1개 주에서 승리하였음. 트럼프는 조지아, 버지니아, 앨라배마, 메사추세츠, 테네시, (알래스카), 아칸소 6개 주에서 승리했고, 버몬트 주에서는 승리가 확실시되고 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은 오클라호마, 텍사스 2개 주에서 승리하며 예상보다 적은 주의 주에서만 승리한 것. 이 외 미네

소타 주에서는 마르코 루비오 의원이 승리했다.

-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린턴이 7개 주, 버니 샌더스가 4개 주에서 승리했다. 힐러리는 조지아, 버지니아, 앨라배마, 메사추세츠, 테네시, 텍사스, 아칸소 주에서 승리했고 버니 샌더스는 버몬트, 오클라호마, 미네소타, 콜로라도 주에서 승리함.
- 슈퍼화요일을 거치면서 클린턴은 슈퍼대의원을 포함해 총 1001명의 대의원을 확보하게 됐으며 샌더스 의원은 371명(슈퍼대의원 22명 포함)을 가져감. 민주당에서 대선후보를 정하는 대의원 '매직 넘버'는 2383명. 클린턴이 매직넘버의 절반 가까이 확보하면서 주요 언론은 클린턴의 본선행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
- '슈퍼화요일'이 끝나고, 2주 뒤 3월 15일에 열리는 '미니 슈퍼화요일'에는 플로리다, 일리노이,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등 5개 주에서 경선이 열리며 '미니 슈퍼화요일'이 끝나면 전체 대의원의 50%가 결정될 예정임.
- 하지만 변수는 매직넘버를 기준으로 5부 능선을 넘은 클린턴과 달리 트럼프는 당내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그 기세가 클린턴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 특히 승자독식제와 공화당 2,3위 후보 단일화 여부가 트럼프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음.
- 향후, 미국에서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나올지 재벌 대통령이 나올지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 ○ 일본 여론

### ▶ '아베노믹스' 부정적 여론 절반 넘어...

- 29일 니혼케이자이(닛케이) 신문과 도쿄TV가 지난 26~28일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제정책 '아베노믹스'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론조사 결과, 아베 정권의 경제정책을 '평가한다(가치를 인정한다)'고 한

응답은 31%에 그친 반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로 나타남.

- 닷케이가 작년 2월 이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노믹스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0%에 이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평가한다'는 응답 역시 최저치를 기록함.
- 같은 조사에서 추가 재정 투입을 포함한 경기대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엔 '필요하다'가 47%로 '필요하지 않다'(35%)보다 높게 나타남.
-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 인상(8%→10%) 문제에 대해선 응답자의 절반 이상(58%)이 '반대'했다. '찬성' 응답은 33%였다.
- 이밖에 일본은행이 최근 도입한 '마이너스(-) 금리'에 대해선 '평가한다'가 23%, '평가하지 않는다'가 53%로 나타남.
- 이 같은 결과는 엔고(円高)와 주가 약세 등의 영향이 아베 정권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해온 배경이었던 경제운영에 대해서 회의적인 견해가 확산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에 대한 여론이 싸늘한 시점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7%로 1월 조사 때와 같았으나,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9%로 전월대비 5%p 높아짐.

## ○ 영국 여론

### ▶ '브렉시트' 여론조사 들쭉날쭉...

- 영국의 여론조사는 그 신뢰성에 대한 논의가 난무함. 실제로 지난해 영국의 여론조사 기관들이 총선 결과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바 있음.
- 최근 브렉시트와 관련해 영국 언론에서는 며칠에 한번꼴로 여론조사 결과가 게재되고 있지만, 언론에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로 브렉시트가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단언하기 어렵다는 해석임.
- 실례로, 지난 2월 4일 여론조사 기관 유고브 조사에서 브렉시트 지지는 45%, 반대는 36%로 나타났지만, 2주가 안된 시점에 또 다른 기관인 입소스 모리에

서 브렉시트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는 반대가 54%, 찬성이 36%인 것으로 밝혀짐.

- 그러나 2월 4주차에 캐머런 총리가 EU로부터 영국의 특별 지위를 확보받고 보리스 존슨 런던 시장이 브렉시트 지지 의사를 밝힌 뒤 나온 유고브 조사에선 브렉시트 반대가 37%, 찬성이 38%로 초박빙 양상을 보인 것.
- 여론조사의 들쭉날쭉한 결과는 조사방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해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렉시트의 향배는 '잔류'쪽에 상대적으로 더 큰 유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이는 브렉시트와 같은 여론조사에서 일반적으로 찬반유세 기간의 끝이 다가올수록, 상당수의 부동표가 현상유지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 브렉시트의 국민투표 결과는 결국 영국이 EU에 남게 될 것이 유력해 보임.

## II. 국내 여론동향

### ○ 필리버스터 관련 여론조사

#### ▶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정당 구도 바꿀 정도는 아니야...

-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난 23일부터 25일 사이 한국갤럽이 정당 지지율을 묻는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pm 3.1\%$ )에서 오히려 야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는 한 조사 결과가 나타남. 특히 국민의당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이 기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지지하는 정당은 새누리당 42%, 더불어민주당 19%, 국민의당 8%, 정의당 3%, 기타 정당 1%, 없음/의견유보 28%로 나타남.
-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와 동일하고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하락, 국민의당은 2%포인트 하락, 정의당은 1%포인트 상승함.
- 한국갤럽이 조사한 정당지지율의 그간 추이를 보면 국민의당 등장 이후 소폭

하락했던 새누리당 지지도는 지난 주부터 40% 선에 다시 올라섰고 더불어민주당은 평균 20%, 정의당은 평균 3%를 유지하고 있음. 다만, 국민의당은 1월 셋째 주 13%에서 이번 주 8%로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양상을 보임.

▶ **필리버스터 찬반여론, 필리버스터 여전히 찬성해...**

- 최근 알앤서치에서 필리버스터 찬반과 관련된 여론조사(28~29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를 한 결과, 필리버스터에 찬성하는 의견이 47.2%로 나타나, 국민의 절반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와 반대로 필리버스터에 반대하는 의견은 34.1%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필리버스터 찬성(60%대)이 가장 높았고, 서울(53.9%), 수도권(49.6%), 여성(41.6%)보다는 남성(52.8%)에서 찬성의견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20.1%만이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81.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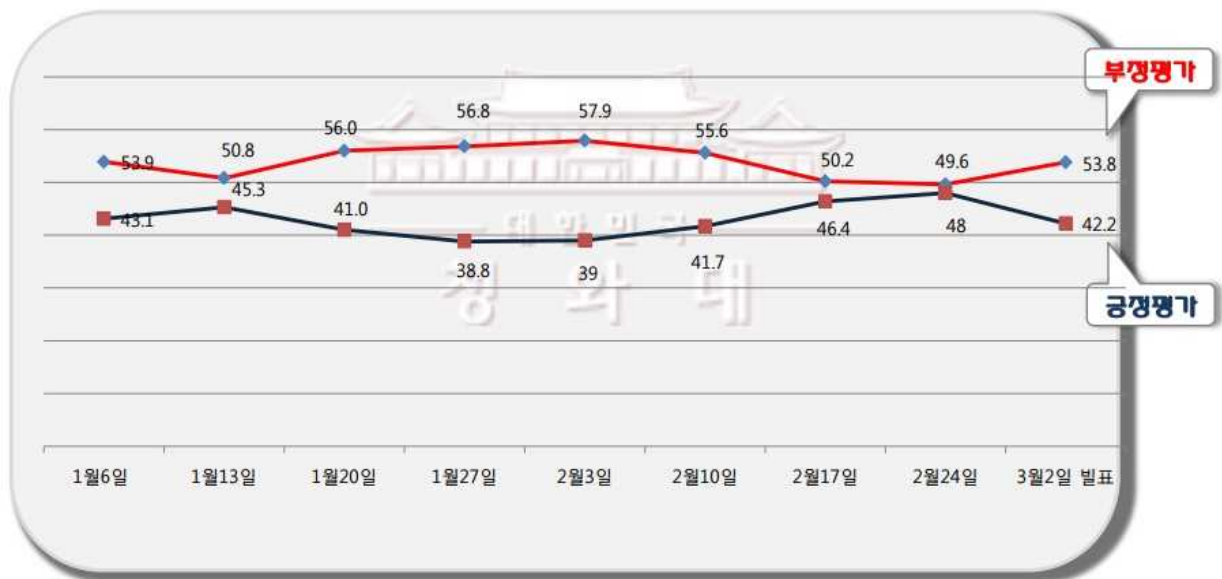
○ **대통령 국정지지도와 정당지지도**

▶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긍정 48.1%(▲2.0%p), 부정 47.4%(▼0.8%p)**

-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3월 1주차 주중집계(2월 29일~3월 2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긍정평가)는 2월 4주차 주간집계(22~26일) 대비 2.0%p 오른 48.1%(매우 잘함 19.6%, 잘하는 편 28.5%),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p 하락한 47.4%(매우 잘못함 33.6%, 잘못하는 편 13.8%)로 작년 12월 1주차(긍정평가 47.8%, 부정평가 47.0%) 이후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선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박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은 3.1절 기념사로 '국회(야권)심판론 프레임'과 '안보 프레임' 강화하며 긍정평가 상승, 약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부정평

가를 오차범위 내에 앞서기 시작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알앤서치에서 실시한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3월 1주차 주중 집계(2월 28일~29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0%p)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5.8%p 하락하여 42.2%로 조사됨.
- 반면 부정평가는 4.2%p 상승하여 53.8%로 조사됨.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응답한 대통령 국정지지율은 전주대비 9.8%p 하락하였고, 30대에서 또한 7.3%p 하락하여, 전체 지지율은 하락을 견인함. 이는 테러방지법과 관련된 야당 국회의원들의 필리버스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할 수 있음.



출처: 알앤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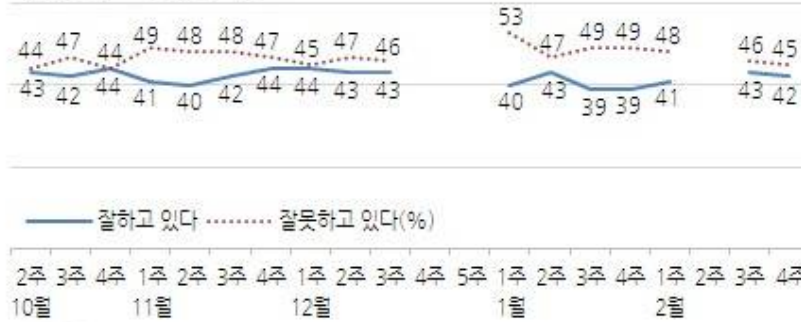
- 한편, 한국갤럽에서 2월 4주차 박근혜 대통령 직무평가를 조사한 결과, 42%는 긍정 평가했고 45%는 부정 평가했으며 9%는 의견을 유보함.
-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직전 조사인 2월 3주차 결과에 비해 1%p 하락해 격차 폭은 3%p로 유지됨.
- 각 세대별로는 긍정/부정률은 20대 18%/64%, 30대 14%/76%, 40대 31%/54%, 50대 58%/30%, 60대 이상 77%/12%로 나타남.
- 주요 지지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지지층(417명)은 77%가 '잘하고 있다'고 답



했음.

- 더불어민주당 지지층(194명)과 국민의당 지지층(77명)에서는 각각 85%, 62%가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지지정당이 없는 무당층(282명)에서도 부정적 견해가 더 높게 나타남(긍정 22%, 부정 51%)

㉔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최근 20주



㉕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2015/2016년



\*2015년 2월 3주, 9월 5주, 12월 4, 5주, 2016년 2월 2주는 조사하지 않음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99호 www.gallup.co.kr

출처: 한국갤럽

### ▶ 정당지지도

- 리얼미터에서 실시한 3월 1주차 주중 집계(2월 29일~3월 2일 조사,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에서 새누리당이 지난주 주간집계 대비 1.5%p 상승한 45.0%로 상승세 이어갔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28.1%로 1.4%p 오른 반면, 국민의당은 11.0%로 1.1%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어 정의당은 2월 4주차 때 경기·인천, 30대, 사무직, 진보층에서의 강세로 1.2%p 상승한 4.7%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으나, 3월 1주 주중집계에서는 소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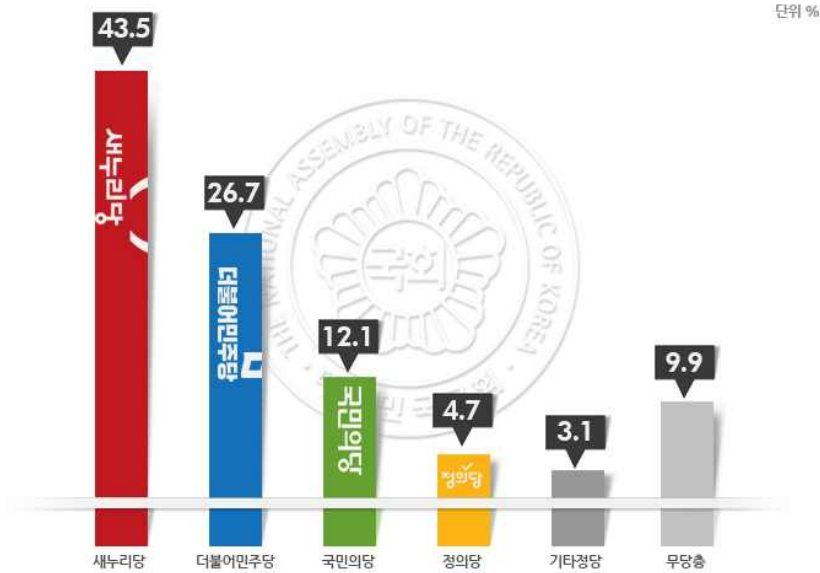
하락한 4.4%로 나타남. 이 외에 기타 정당은 0.2%p 하락한 3.3%, 무당층은 1.7%p 감소한 8.2%를 기록함.

- 지역별로, 수도권(새누리 42.9% vs 더민주 31.2%, 국민의당 10.1%, 정의당 4.5%)에서는 야권이 45.8%로 새누리당보다 해당지역 오차범위( $\pm 4.4\%$ ) 내인 2.9%p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전·충청·세종(새누리 53.1% vs 더민주 28.5%, 국민의당 6.0%, 정의당 4.5%)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38.9%)보다 14.1%p 더 높았고, 대구·경북(새누리 68.0% vs 더민주 16.8%, 국민의당 2.1%, 정의당 0.8%)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19.7%)보다 3배 이상 우세함.
- 부산·경남·울산(새누리 50.7% vs 더민주 23.9%, 국민의당 8.1%, 정의당 3.3%)에서는 새누리당이 야권(35.3%)보다 15.4%p 더 높았으나 지난주 주간집계에 비해 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광주·전라에서는 더민주(33.7%)가 국민의당(33.4%)을 작년 12월 4주차 이후 약 2개월 만에 처음으로 해당지역 오차범위( $\pm 9.8\%$ ) 내인 0.3%p 앞서는 것으로 집계됨.



## 정당 지지도 '16년 2월 4주차

"선생님께서서는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 조사기관: 리얼미터  
 • 총응답자: 전국 성인 2529명 • 조사방법: 유무선 RDD 전화면접 및 자동응답 • 조사기간: 2016년 2월 22일(월)~26일(금)  
 • 응답률: 5.2% • 표집오차: 95% 신뢰수준 ± 1.9%p

Infographic \_ JeDEI

출처: 리얼미터

- 2월 4주차와 3월 1주차 정당지지도를 통해 야권이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선전하고 있지만, 야 3당이 분열된 채로 총선이 치러진다는 점,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70%에 달하는 60대 이상 유권자 인구가 이번 총선에서 처음으로 가장 인구가 많은 연령대로 올라선 점, '저연령·저투표율, 고연령·고투표율'의 비대칭적 투표율, 박 대통령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과 작년 정기국회부터 축적되고 있는 반개혁 국회(야당)심판론의 잠재 파급력, 테러방지법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안보정국의 지속화에 따른 여당 지지층의 결집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불과 44일 앞으로 다가온 현재의 20대 총선 환경은 야권보다는 새누리당에 보다 여전히 유리한 상황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출처: 알앤서치

- 하지만, 알앤서치에서 실시한 3월 1주차 주중집계(2월 28일~29일 조사, 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0%p)에서 정당지지도는 2월 4주차와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임.
- 새누리당 지지율은 공천 논란과 필리버스터 정국으로 전주대비 7.4%p 하락한 37.5%를 기록함. 더불어민주당 지지율 또한 전주대비 4.5%p 상승한 24.5%를 기록함. 반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1.4%p 하락한 8.9%를 기록하였고, 이는 지난 1월 셋째 주부터 집계된 국민의당 지지율에서 최초로 10%선대를 못 미친 결과임.
- 정의당은 1.1%p 상승한 5.3%의 지지율을 기록하였음.